

2012

DIPLOMATIC

WHITE

PAPER





제 2 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6
제2절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32
제3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40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48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남북 대화채널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비정치적 순수 민간교류 허용, 개성공단 애로해소 조치 등의 유연화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도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후계세습과 2012년 강성대국 출범을 위한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위협을 병행하며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실리 확보를 도모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김정일 사후 외교적 대응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정상 및 외교장관간 외교채널을 신속히 가동하여 긴밀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본·러시아 정상 및 유엔 사무총장과도 관련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외교장관 채널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의도 이어졌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미국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으며, 클린턴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당국간 다양한 레벨의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내 이상징후 파악 등을 위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중국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호주·영국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외교적 대응을 통해 우리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자 한다.

2. 남북관계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면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향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등 대북정책의 기존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여러 양자·다자회담 계기에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정부는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산모 및 영·유아 보건·영양개선 사업, 식수·환경개선 사업, 교육 사업 등 대북 관련 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유엔아동기금을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지원, 영양개선사업 등에 약 65억원(565만불)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인도적 협력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고,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131억원에 달하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승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수해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0억원 상당의 구호품 전달을 추진하였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표명해 오지 않음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2011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정부차원	65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민간차원	131	-
계	196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적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남북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되었으나, 우리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중대한 인도적 사안으로서 조속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국제적십자 총회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북한 인권 문제

정부는 ‘인권은 중요한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2011.3.24 채택) 및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2011.12.19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해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11월에는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 시 협의를 갖고 북한이탈주민 ·

인권관련 민간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5) 북한 이탈주민문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제 62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2011.10.3) 및 제 66차 유엔총회「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2011.10.19) 시 국제사회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촉구 내용이 포함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2011.12.19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다자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1년 기준 총 23,100명이 되었다.

연도별 국내입국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인원	829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또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복지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6자회담 중단으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NEAPSM: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그룹회의가 2009년 2월 모스크바회의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6자회담 실무그룹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관련 논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역내 상호신뢰 구축, 공동번영, 평화안보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 차원(1.5 Track)에서도 동북아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대표적이다. 2011년 10월 한·미·일·중·러의 정부대표 및 학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22차 동북아협력대화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및 북핵문제, 동북아 해양안보, 2012년 동북아 각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안보전망 등 동북아 안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절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2011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영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사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전 사전조치 이행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사전조치 이행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대화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남·북, 미·북 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7월과 9월에 1차 및 2차 비핵화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연이어 미·북 대화도 두 차례 개최되었다. 그러나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비핵화 대화 논의가 일시 중단되었다.

1. 6자회담 관련 경과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목표로 2003년 8월 처음 개최되었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2011년 말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6자회담은 2005

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6자회담의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무시한 채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가 분명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2009.6)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영변 경수로 건설 현장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외에 공개(2010.11)하였고, 이로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UEP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는 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천안함 폭침(2010.3) 및 연평도 포격도발(2010.11)까지 감행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2.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 노력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중·러 5개국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2010.12.29)시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2011년에는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대화 공세를 통해 양보를 얻어내는 기존의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인식 하에 6자회담을 통한 해결노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요국들과의 협의 시에 2010년 말 북한이 공개한 UEP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9.19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회담만 재개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아울러, 비핵화 남북회담을 추진하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과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영변 UEP 활동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포함한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5자 간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를 꾸준히 활용하였다.

우선 한·미는 정상회담(1회), 외교장관회담(4회),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3회) 등을 통해 북한 UEP 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도 정상회담(4회), 외교장관 회담(7회)을 실시하여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공조를 확인하고, 빈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8회)를 통해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3자 고위급협의를 통해 3자 공조를 굳건히 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일·중·러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한·중 정상급 회담(2회), 외교장관회담(6회),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8회)를 통하여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설득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는 한·러 정상회담(1회), 외교장관회담(2회),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회)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과 UEP의 불법성에 대한 러시아의 공감을 얻어내었다.

》》》 북핵 문제 관련국간 주요 협의

일 자	주요 내용
2011.1.5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28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2.2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2.10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2.17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2.24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3.2	한반도본부장, 아인혼(Einhorn) 미 대북제재조정관 면담
2011.3.8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3.12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1.3.14	한반도본부장, 그렉슨(Gregson)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 면담
2011.4.12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1.4.13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일 자	주요 내용
2011.4.14	한반도본부장, 스타인버그(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11.4.26, 29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4.28	한반도본부장, 주한일본대사 면담
2011.5.4	한반도본부장, 세이모어(Samore) 백악관 군축·비확산 조정관 면담
2011.5.4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1.5.11, 21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5.17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6.9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6.10	한반도본부장,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2011.6.1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6.22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7.1	한반도본부장,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1.7.18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7.22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발리)
2011.8.4	한반도본부장, 주한 일본대사 면담
2011.8.25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8.29	한반도본부장,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2011.9.7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9.19	한반도본부장, 킹(King) 미 북한인권특사 면담
2011.9.21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북경)
2011.9.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9.27	한반도본부장, 주한 일본대사 면담
2011.10.6	한반도본부장, 아인혼(Einhorn) 미 대북제재조정관 면담
2011.10.6	한반도본부장, 번즈(Burns)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11.10.13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0.25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0.27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0.30	한반도본부장, 주한중국대사 면담
2011.11.1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1.11	한반도본부장, 주한일본대사 면담
2011.11.14	한반도본부장, 아마노(Amano) IAEA 사무총장 면담
2011.11.14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1.17	한·미·일 3자 고위급협의
2011.11.18	한반도본부장, 성김(Sung Kim) 주한미국대사 면담
2011.12.5	한반도본부장, 아인혼(Einhorn) 미 대북제재조정관 면담
2011.12.6	한반도본부장, 주한러시아대사 면담
2011.12.8, 10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일 자	주요 내용
2011.12.15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2.2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2.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1.12.26	한반도본부장, 주한일본대사 면담
2011.12.28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3.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2010년 11월 북한의 UEP 공개는 북한 핵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뚜렷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북핵 문제가 지역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한·호주 정상회담(4.25)에서는 북한에 UEP를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언론성명을 도출하는 등 호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덴마크 정상회담(5.12), 한·EU 정상회담(11.3),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11.18), ASEAN+3 정상회의(11.18),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9) 등 유럽·동남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G8 정상회의(5.26-27)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와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였다. 장관급 다자회의에서도 북핵 관련 문안이 포함된 결과문서가 다수 채택되었다. G8 외교장관회의(3.14-15), ASEM 외교장관회의(6.6-7), ARF회의(7.21-23)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UEP를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55차 IAEA 총회는 북한의 UEP와 경수로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북핵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9.22)하였다. 동 결의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북핵문제 관련 주요 양자·다자회의 채택문서

일 자	주요 내용
2011.3.15	G8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파리)
2011.4.25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울)
2011.5.12	한·덴마크 정상회담 공동성명(코펜하겐)
2011.5.27	G8 정상회의 공동성명(도빌)
2011.6.7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부다페스트)
2011.7.23	ARF 의장성명(발리)
2011.9.2	IAEA 사무총장 북핵보고서 회람(비엔나)
2011.9.22	제55차 IAEA 총회 북핵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비엔나)
2011.12.2	UN 총회 핵무기 전면철폐 결의안 채택(뉴욕)

4. 비핵화 남북회담 개최

우리 정부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 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함은 물론 남북 간에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남북회담 개최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미·일·중·러도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연초 개최되었던 미·중 정상회담(1.18~21)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마침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기간 중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7.22)이 개최되었다. 한·미가 긴밀

한 공조 하에 추진해온 남·북간 대화가 먼저 성사됨으로써 사전 조치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동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비핵화 남북회담의 유용성과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2011.7.22, 발리)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미·북 대화(7.28-29)가 개최되었다.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의가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 미·북간 대화가 연이어 개최된 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9.21)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양측은 2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3시간이 넘도록 비핵화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어서 만찬도 함께 하였다. 1차 회담에서 전체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면,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 양측은 사전조치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했으며, 그 결과 6자회담 재개와 그랜드바겐 구상¹⁾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로부터 약 1개월 후 제네바에서 2차 미·북 대화(10.24-25)가 개최되어 양자 대화 과정은 지속되었다.

이렇게 두 차례씩 개최된 남·북간, 미·북간 대화는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6자 회담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영변 UEP 활동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등 사전조치 이행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1)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또는 일괄타결방안: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으로,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최초 제시

5. 김정일 사망 및 향후 과제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대화를 통해 진행되던 비핵화 대화과정은 일시 중단되었다. 정부는 유사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후계체제의 등장이 향후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이 없었고, 비핵화 남북회담도 두 차례 개최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 하에 중·러의 협력을 확보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사전조치 이행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향후 사전 여건이 조성되어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리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 그랜드바겐 구상에 따라 북핵 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3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1.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

2011년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중동문제를 비롯한 범세계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13년만의 국빈 방미 계기에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범위는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201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한 유대 및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미관계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13년만의 국빈 방미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10.13)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양측에 가지는 안보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 협력·



한·미 정상회담(2011.10.13, 워싱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인준이 완료된 점을 평가하고, 한·미 FTA 발효가 한·미 동맹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사망 발표(12.19) 후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김정일 사망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급한 현안 대처에 있어 한·미 정상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정상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총 4회)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양국 외교장관은 2011년 4월 16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방안, △한·미 FTA, △북핵·북한 문제,



한·미 외교장관회담(2011.4.16, 서울)

△일본지진·중동문제·EAS 등 지역·범세계적 문제에 관해 협의 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국무부간 인사교류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양국 외교부간 긴밀한 의사소통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2011년 6월 24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북핵·북한 문제, △고엽제 문제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 △중동문제·비확산·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동 방미 계기 김성환 장관은 주요 행정부 인사, 의회 중진의원, 학계인사 면담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의 저변 확대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한·미 외교장관회담(2011.6.24, 워싱턴)

양국 외교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7.2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ILF-4,

11.30) 등 각종 다자 국제회의 계기에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갔다. 이 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김정일 사망 발표(12.19) 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김정일 사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활발한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 및 관심사에 관한 다층적 협의·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4.16)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한·미 외교차관보 전략대화(4.26, 워싱턴)를 개최하여 양자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아태지역 문제 및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범세계적 문제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외교장관회담시 합의된 ‘외교통상부-국무부간 인사교류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캠프(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11년 총 5차례 방한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코헨(David Cohen)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줌왈트(James Zumwalt)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미첼(Derek Mitchell) 버마 특별대표 등이 방한하여 양국 고위 당국자간 정책 협의를 수시 개최하였다.

2011년 한·미간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 한·미 정상회담

일 자	계 기
2011.10.13	국빈 방미(10.11-15) 계기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 자	계 기
2011.4.16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서울)
2011.6.24	김성환 장관 방미(6.20-25)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워싱턴)
2011.7.23	ARF 외교장관회담 참석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발리)
2011.11.30	HILF-4 참석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부산)

2. 한·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2011년에도 우리 정부는 미 의회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미 의회 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학계·전직 고위급 인사 등 주요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양국 입법부간 교류와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외통위 의원들이 미 의원들과 교분 구축을 위해 미 의원 지역구를 방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미 의원 방한 초청(CMEP :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동 초청사업은 우리측이 재정지원을 통해 미 의원들의 방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산체스(Loretta Sanchez)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리드(Tom Reed) 하원의원, 배스(Karen Bass) 하원의원이 방한하였다.



산체스 의원,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2011.3.12, 서울)

이러한 대미 의회 외교 저변 확대 추세 속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10월), 우리 대통령 방미시 의회 합동 연설 실시(10월), 하원 국군포로·전신납북자 결의안 채택(12월) 등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측 인사와 미국 학계 및 정부의 전·현직 고위급 인사 등 미 여론 주도층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도 이루어졌다.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및 게이츠(Robert Gates) 전 국방장관, 맥도넬(Robert McDonnell) 버지니아 주지사, 비아라이고사(Antonio Villaraigosa) LA 시장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방한하였다. 프리처드(Jack Pritchard)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햄리(John Hamre)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빅터 차(Victor Cha) CSIS Korea Chair,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CFR) 회장, 허바드(Thomas C. Hubbard)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등 학계 인사도 다수 방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 추진하여,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미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Volunteers)을 7월 및 10월 두 차례 방한 초청하였다. 이에 따라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 및 가족들이 한국을 재방문하여 과거 봉사지역을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체험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한국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 기억하고 보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양국민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 평화봉사단원 환영 리셉션(2011.10.17, 서울)

또한 정부는 한·미 대학생, 미 상·하원 의원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홍보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활동(66회)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미 관계 발전의 저변도 공고히 하였다.



| 외교업무 관련 대학 특강(2011.5.4, 대전)

3.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부단히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새로운 범세계적 안보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근 수년간 동맹 재조정 및 강화 사업을 보다 확대·심화해 왔다. 양국은 2010년 합의된 일련의 동맹 강화 방안을 토대로, 2011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형태로 한·미 동맹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의 심화·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1년 4월 2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 발발 약 1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응방향을 조율하였으며, 대북정책, 일본 대지진 대응 공조 등 역내 안보협력과 더불어 해상안보, 이란·아프가니스탄 등 관련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외교·국방당국간 공동의 전략·정책적 합의가 있는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와 함께 2011년 정식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및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Strategic Alliance 2015 Working Group) 회의를 총 2회 병행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 확장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협의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 역지력의 지평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사업의 면밀한 이행점검을 통해 한·미동맹의 내실과 외형이 조화롭게 재조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였다.

▶▶▶ 2011년 SPI / EDPC / 전략동맹2015 공동실무단 개최실적

일 자	대표단	개최지
2011.3.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Michael Schiffer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하와이)
2011.9.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Michael Schiffer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국 (서울)

또한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43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개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유지·강화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증대에 대해 맞춤형 억지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동맹억지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다수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동맹 현안 협의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설립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2011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확장억제수단 운용 관련 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여, 확장억제 관련 양국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핵 위기시 대응방안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지능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기로 합의하고 「전략동맹 2015」협의체를 내에서 이전사업 이행현황을 수시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2011년 본격적으로 건설단계에 진입한 기지이전·재배치 사업 추진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재배치 사업의 원만한 이행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운영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 및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현안을 원만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한 SOFA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중에는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관련 의혹 해소,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이후 SOFA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검토 착수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우선 정부는 2011년 5월 스티브 하우스(Steve House)씨의 고엽제 매립 주장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무총리실 주재 ‘범정부 대응 TF’ 및 ‘한·미 공동조사단’을 신속하게 구성하였으며, 6개월여에 걸친 다양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매립 증거가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금번 조사 과정에서 미측은 우리측 민간 전문가를 공동조사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우리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기지 출입을 허용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데 이는 향후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1년 9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이후,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한 미측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건발생 직후 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범죄 대응 정부 TF’를 구성하여 현행 SOFA상 우리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주한미군이 실시중인 야간통행금지조치 연장 등 보다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2011년 11월에 개최된 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SOFA 형사분과 위원회에 「피의자 구금절차 등 SOFA 제22조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SOFA 형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한·미간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SOFA 합동위, 특별합동위 및 분과위 등에서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SOFA 운영의 개선·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188차 SOFA 합동위원회(2011.6.14, 서울)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1. 한·일 관계

2011년 한·일 양국은 한·일 도서협정 발효에 따른 조선왕조도서 반환을 포함, 한·일간 과거사 현안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통상, 문화·인적 교류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여 왔다.

우선 한·일 정상은 5월 한·일·중 정상회의(동경) 및 9월 UN 총회(뉴욕)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북한문제 및 지역·국제 이슈 대응에 있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양자 차원에서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2월 일본 교토를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은 정상간 신뢰 제고 및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양국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고 북한문제 관련 한·일 및 한·미·일간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일본은 3.11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해일 사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바,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우호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기여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한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동북지방 부흥·관광 파트너십 채택 △원자력안전 협력 △방재분야 협력 등 실질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조선왕조도서 반환은 2010년 8월 일본 정부의 「총리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한·일 도서협정’ 서명, 2011년 6월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을 통한 국내절차 완료 및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실현되었으며, 2011년 10월 노다 총리 방한 계기 5책이 우선 반환된 데 이어 12월 잔여 도서 1,200책의 반환이 완료되었다.

2011년 양국간 교역은 1,080억불을 기록하여 최초로 1,000억불을 돌파하였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방한일본인은 약 329만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약 27만명이 증대되었으나, 3.11 동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방일한국인 수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 비해 약 78만명이 감소한 약 166만명을 기록하였다. 양국간 문화교류도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가 서울(9.25) 및 동경(10.1-2)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명실상부한 한·일 양 국민간 최대 문화축전으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은 공통의 역사인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교토)에서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확립하기 위해 201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서울)의 후속조치로서 12월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공식 출범하였다.

한편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군대위안부 및 원폭피해자의 對日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동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9월 15일 및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교공한을 통해 일측에 청구권협정 제3조1항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를 촉구하였으며, 면밀한 법적 검토 및 단계별 전략 마련을 위해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T/F(‘11.9.14)’를 설치하고 T/F 자문단(‘11.10.7)을 발족하였다. 또한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12월 교토 한·일 정상회담시 일측에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 및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였다. 2011년 3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무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강력한 항의와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4월 일본의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7월 우리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한 일본 외무성 직원의 공무탑승 이용 자제, 8월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 새로운 유형의 공세적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국내외 인식제고 활동 등을 연중 지속 전개하였다. 특히 정부는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5.22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동경)
2011.9.21	UN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뉴욕)
2011.10.19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서울)
2011.12.18	이명박 대통령 방일 계기 한·일 정상회담(교토)

》》 한·일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1.15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
2011.2.16	김성환 장관 방일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동경)
2011.3.19	제5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교토)
2011.5.20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동경)
2011.7.23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발리)
2011.9.24	UN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
2011.10.6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

》》 한·일 고위급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 자	주요 내용
2011.1.6-7	겐바 국가전략담당대신 겸 민주당 정조회장 방한
2011.1.10-11	기타자와 방위대신 방한
2011.1.10-12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011.4.25-26	아소 전총리(일·한협력위원회 회장대행) 방한

일 자	주요 내용
2011.4.28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방일
2011.5.24-26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011.6.15-17	하야시 요코하마시장 방한
2011.6.20-21	니시미야 일 외무성 외무심의관 방한
2011.6.27-29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방일
2011.6.30	제1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동경)
2011.7.16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방일
2011.7.15-18	나카노 납치담당대신 겸 국가공안위원장 방한
2011.8.9-10	오오무라 아이치현지사 방한
2011.8.29-31	무라이 미야기현지사 방한
2011.9.30-10.1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2011.10.9-11	전략적 일한관계를 구축하는 의원모임 방한
2011.10.10-12	요코미치 중원의장 방한
2011.10.10-12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방한
2011.10.13-15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일
2011.10.18-19	한·일·중 국제학술회의 참석 계기 하토야마 전총리 방한
2011.11.1-2	하토야마 전총리 방한
2011.11.18-19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2011.11.25-27	후루카와 국가전략대신 방한
2011.11.28	제35차 한·일 / 일·한 합동총회 개최(서울)
2011.12.18-20	자민당 의원 일행 방한
2011.12.25-27	공명당 의원 일행 방한

2. 한·중 관계

2011년도 한·중 관계는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를 통해 격상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하였으며, 실질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와 접촉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회·국방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4월 김황식 총리 공식방중, 5월 한·일·중 정상회의 및 11월 ASEAN+3 정상

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간 회담, 10월 리커창 상무부총리 방한 등을 통해 양국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외교장관 회담도 2월 양제츠 외교부장 방한 및 3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을 포함하여 총 6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5월 장수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및 7월 정의화 국회부의장 방중 등 양국 의회간 고위급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7월 국방부 장관 방중 및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등 국방 분야 교류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한·중 양국은 외교장관간 전화통화, 6자회담 대표간 협의,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학술분야에서도 2008년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출범한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에서 2010년 4월 ‘미래 공동발전을 위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제하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2011년에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꾸준한 발전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2011년 기준 한·중간 교역액은 전년도보다 332억불 증가한 2,206억불로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수출, 수입, 투자, 무역 흑자대상국의 위치를 유지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또한 수교 당시 13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는 2011년 641만명에 달하였으며, 양국간 매주 항공편수는 837편을 상회하였다.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쌍방향 문화교류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한·중 관계를 이끌어 갈 양국 청소년 약 1,200명이 상호 방문하여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양국의 유학생은 각각 상대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100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중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이 중국 언론과 70여회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홍보하였다. 또한 주중국 지역 우리 공관들은 한·중 우호주간, K-Pop 경연대회, 한식세계화 행사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 활

동을 펼쳤다.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어 전공 한국 대학생을 교사로 활용하여 취약 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중국어 교실(서울시 2곳, 청주시 1곳)을 운영함으로써 한·중 청소년들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우호정서를 강화하는 지란지교(芝蘭之交) 사업을 실시하였다.

》》》 한·중 대통령-총리간 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5.22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동경)
2011.11.18	ASEAN+3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발리)

》》》 한·중 총리(급) 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4.13	김황식 국무총리 공식 방중 계기 한·중 총리회담(베이징)
2011.10.26	리카창 상무부총리 공식 방한 계기 국무총리 면담(서울)

》》》 한·중 외교 장·차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2.23	양제츠 외교부장 방한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2011.3.19	제5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교토)
2011.3.29	외교통상부장관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2011.6.6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부다페스트)
2011.7.21	ASEAN+3/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발리)
2011.9.20	UN 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2011.12.27	제4차 한·중 고위급(제1차관-장조천 외교부 수석부부장) 전략대화(서울)

》》》 한·중 고위급 교류

일 자	주요 내용
2011.5.17-22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계기 중국측 대표단 방한 - 단장 : 장수성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2011.6.4	제10차 상그릴라 대회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
2011.7.4-7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방중(베이징, 충칭)
2011.7.7-10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대표단 방한 - 단장 : 차오웨이저우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회장
2011.7.13-16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방중 - 단장 : 홍재형 국회부의장

일 시	주요 내용
2011.7.14-16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방중 - 7.15 한·중 국방장관회담
2011.7.17-22	정의화 국회부의장 방중
2011.7.27	제1차 한·중 국방 전략대화(서울)
2011.8.24-26	정선태 법제처장 방중
2011.8.29-30	제1차 한·중 지도자 포럼(베이징)
2011.10.17-19	한·일·중 국제학술회의 참석 계기 중국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방한
2011.10.26-28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중
2011.11.21-23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방중
2011.11.23-25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방중
2011.12.1	한·중 대변인교류협의회(베이징)

3. 한·일·중 관계

2011년은 2008년 시작된 3국간 별도 정상회의가 한 회기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고,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성공적으로 설립되어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 3국 정상이 1999년 ASEAN+3 계기 처음으로 오찬회동을 시작한 이래 3국 협력은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3국간 별도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5월 21일-22일간 동경에서 제4차 3국 정상회의, 11월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EAN+3/EAS 계기 제11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 3국간에는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총 50여개 정부간 협의체와 100여개의 협력 사업이 시행 중이다.

특히 2011년 3국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 협력 및 원자력 안전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에서 재난관리 협력 문서 및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를 채택하였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차 3국 재난관리기관장회의, 11월 동경에서 제4차 3국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가 개최되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도 3국 협력은 지속 확대되었다. 제4차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1년 12월에 조기 완료하였으며, ‘한·일·중 청소

년 미래포럼'이 신설되어 3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3국 협력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1년 5월 17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이 발효되고 9월 1일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이는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이 3국 협력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및 발전을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2년여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동 사무국 설립을 통해, 향후 3국 협력은 제도화를 기하면서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공식 출범행사(2011.9.27, 서울)

한·일·중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5.21~22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 · 칸 나오토 일본총리 · 원자바오 중국총리간 의견 교환(동경)
2011.11.19	ASEAN+3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 · 노다 일본총리 · 원자바오 중국총리간 회의(발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일 자	주요 내용
2011.3.19	제5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통하여 김성환 장관·마츠모토 다케야키 외무대신·양제츠 외교부장간 의견 교환(교토)

4. 한 · 러 관계

2011년은 한 · 러간 정상 교류가 정례화되는 등 고위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는 해였다. 한 · 러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년간 총 4회 정상간 상호방문, 총 6회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정상 외교를 정례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강화 하였다.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실무 방문,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남·북·러 3각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양 정상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등 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방러 계기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대화에 양 정상이 참석, 한·러 대화가 양국관계를 이끌어가는 포괄적 포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 8월에는 김성환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한·러 관계가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한 단계 도약한 것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 2012년 양국에서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 하였다. 또한 전년도 대비 양국간 교역액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협력, 에너지 효율성, IT, 의료 등 분야에서의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차관급 전략 대화, 정책협의회(차관보급 및 국장급),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영사국장회의, 어업위원회 등 각급 고위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간 협의채널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양국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이 지속 논의되었다.

2011년 한·러간 고위급 인사 교류

》》 한·러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11.2	이명박 대통령 방러 계기 한·러 정상회담

》》 한·러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11.8.8	김성환 장관 공식 방러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

한·러 고위인사 교류

일 자	주요 내용
2011.1.28-29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차관 방한
2011.2.7-11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장 방한
2011.2.24-26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 방한
2011.3.27-30	유르첸코 노보시비르스크 주지사 방한
2011.4.18-20	흐리스텐코 산업통상부 장관 방한
2011.4.24-26	보리소프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방한
2011.5.29-6.4	김영삼 전대통령 방러
2011.6.13-15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방러
2011.6.13-26	레베데프 러시아 대법원장 방한
2011.10.24-26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방한
2011.11.22-24	데니소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 방한

2011년에는 양국간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잠시 주춤하였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완전히 회복되어 사상 최초로 한·러 교역량이 200억불을 돌파하였다. 2011년 한·러시아 교역액(211.5억불)은 전년(176.5억불)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극동지역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한 93.6억불을 기록하며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러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수 출	23.4	38.6	51.8	80.9	97.5	41.9	77.6	103.0
수 입	36.7	39.4	45.7	69.8	83.4	57.9	98.9	108.5
총교역	60.1	78.1	97.5	150.7	180.9	99.8	176.5	211.5
무역수지	△13.3	△0.8	6.1	11.1	14.1	△16	△21.3	△5.5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방러시 천명한 ‘3대 新실크로드’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지역인 극동 시베리아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제7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제2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측 중앙·지방정부 대표 및 경제인 약 130명이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하여 극동시베리아 개발관련 양국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극동 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였다. 현대중공

업의 연해주 진출(2011년 9월, 미하일롭카 농장),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최 우리 영농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4회) 등 우리 영농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2011년 러 수역내 어획 쿼터 1만톤을 추가 확보(총 74,261톤)하여 쿼터 협상 개시 이후 사상 최대 어업 쿼터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석유(8위)·가스(7위)·유연탄(5위) 등 주요 자원 도입국인 러시아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사할린 II LNG(20년간 연 150만톤) 도입, 2010년 4월 러시아산 천연가스 추가 도입을 위한 한·러 공동조사가 일단락되었고, 2011년 8월 러·북 정상회담시 가스관 연결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입장에 따라 러·북, 한·러간 북한 경유 가스관 연결 사업 논의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경제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러시아와 경제현대화 파트너십을 체결, 에너지·원자력·우주·의료·정보통신 등 러시아 경제현대화 핵심사업에 대한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러시아가 경제현대화 핵심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콜코보 혁신단지에 한국 연구기관 및 기업 진출이 추진 중에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 효율화, 의료기술 현대화 분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관련 기술교류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학술 분야에서는 러시아 니즈니 노보고로드 및 캄차카주 지역 ‘거점도시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홍보하여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교류협력을 확대하였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푸틴 총리가 양국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선물한 시베리아 아기 호랑이 한쌍이 2011년 5월 한국에 도착, 6월 23일 서울대공원에서 환영행사를 열어 양국 민간의 우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